

2.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
나.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

2.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(2015/03/03개정 · 시행)

1) 목적

- ☐ 증권회사 인수 · 합병 활성화, 단기자금시장 개편 등 목적으로 2015년 3월 3일 개정된 「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위임사항을 정함

개정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정부 정책

- 증권회사 M&A 촉진방안(2013.12월)
: 인수 · 합병 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
-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(2013.11월)
: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이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됨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저하시키고, 콜시장 불안을 통해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,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
-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(2014.06월)
: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거래소 · 금융투자협회 내규상 거래한도 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
-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(2014.08월)
: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계좌설정 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의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계좌설정 보증금의 보증금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해졌다는 점에서 계좌설정보증금 예치 의무를 폐지
-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(2014.07.10, 2014.07.24) 등
: 위장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 및 외국인 투자자 등록신청시 내국인의 가장 등록 거부 · 취소근거 마련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규정 및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☐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자기매매한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(제2-24조 제목변경, 동조 제2항)

- 증권회사가 파생상품을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경우, 일별 최고 손실한도를 '영업용순자본의 50% 이내'로 정하도록 함
- 또한 기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시켜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자기거래 내부통제 실시를 강화함

☐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을 폐지함(제4-22조 제3항)

- 증권회사로부터의 매수대금 융자·매도증권 대여 등 개인투자자와 증권회사와의 신용거래시 필요한 계좌설정보증금(100만원) 예치의무를 폐지함
 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5조 제1항에 따라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

☐ 인수·합병한 증권사의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함(제4-92조의2)

- 국내 증권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가 타 국내 증권회사를 인수·합병하여 (i) 자기자본이 20% 이상 증가되거나(이 때 인수·합병에 의한 자기자본액증가액이 1,000억원 이상이어야 함), (ii)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 증가되는 것을 요건으로 함

☐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 등록하는 내국인에 대한 거부·취소 근거를 명확히 함(제6-13조 제5호 신설)

-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내국인이 외국법인 명의로 가장하여 행한 외국인 투자 등록을 거부·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
 - 외국법인 명의를 통해 내국인이 '외국인 기관투자자'로 가장하여 증권 매매를 함에 따른 각종 규제 회피·탈세·법규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함

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 절차를 마련함(제7-58조)

- 판매 중지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해당 펀드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가 없음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역외펀드의 판매 중지가 가능함

□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를 제한함(제8-81조)

-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개편방안에 따라, 은행·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로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기관을 한정함

나.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척 일부개정(2015/03/03개정·2015/04/01시행)

1) 목적

□ 최소영업자본액 제도 도입에 따라 「금융투자업규정」(2015.03.03개정)에서 위임한 최소영업자본액 산정방법을 정하고,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등을 정비함

-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영순자본비율(NCR) 및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함(자산운용사 건전성규제 개선방안(2014.09)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(2015.03.03개정))

-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 특성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NCR 대체 지표로서 “최소영업자본제도”를 도입함
-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가 규제 실익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 지적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되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에 관한 지속적인 감독 필요성을 감안하여, “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제도”를 도입함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자산운용사 건전성규제 개선방안(2014.09) 참조)

□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국내 판매 자진중지에 관한 등록취소 근거 도입에 따른 외국펀드 등록취소 신청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

- 현행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제304조) 및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(2015.03.03) 규정(제7-58조)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등록된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를 자진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등록취소 신청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

2) 주요 내용

□ NCR 및 경영실태평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(세칙 제2-4조, 별표5 개정)

- 집합투자재산위험액 산정방법을 금융투자업의 위험액 산정기준에서 제거
- 집합투자업 관련 항목을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, 계량항목 산정기준,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에서 삭제(세칙 별표9, 10, 11 개정)

□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기준 마련(세칙 제2-8조의2, 별표8-2)

- 최소영업자본액 = 법정최저자기자본(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%) +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+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
 -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: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합계액의 0.03%, 다만 소송발생 등 투자자 손실 발생가능성이 낮은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집합투자재산의 0.02%로 함
 -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: 지분증권 등 위험자산 합계액의 1%~10%
- 자산운용업 영업의 본질적인 투자자산(해외현지법인 지분,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등)과 저위험성 자산(국채 등)은 적립대상에서 제외함

고유자산 유형			적립 비율*
증권	지분증권	해외현지법인 지분	-
		관계회사투자지분	7.5%
		기타 투자목적주식 등	7.5%
	채무증권	거래상대방이 정부, 중앙은행, 국제기구, 지방자치단체인 경우	-
		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+인 경우	1%
		그 외의 경우	5%
	집합투자증권	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	-
		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	5%
	기타 증권	7.5%	
대출채권			7.5%
파생상품			10%
총계			

주 : 고유자산 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 비율을 2배로 증액함

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(2015.03.03)



-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평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폐지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대체(세칙 별표13 개정)
 - 매 반기말 자산운용사가 작성·제출한 운영위험 평가지표(고객자산 운용, 내부통제 부문)를 5단계로 평가함
 - 감독·검사담당 부서가 협의하여 구체적인 평가항목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, 감독 및 검사업무의 참고자료로 평가결과를 활용함
-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업무보고서 정비(별책서식1 제17호)
 - 관련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(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등)
 -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관련 업무보고서 항목을 폐지하고,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관련 업무보고서 항목을 신설
 - 투자자문 및 일임계약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투자자문업자의 미영업 여부를 확인
 - 월중 계약 증가·감소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함(기존에는 월말 계약현황과 월중 순증만 기재하고 있어 1회성 계약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였기 때문)
-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 제정(세칙 제8-1조, 별책 서식1 제39-2호)
 - 관련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자산운용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중지사실을 신고하여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함

연구원 박수연(02-3771-0691, sypark@kcmi.re.kr)